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다

황 총리와
장관들은 퇴진하라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멈추라

황교안 등의
적폐들

2, 4 ~ 5면

갈림길에 선
퇴진 운동

3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 상징

5면

트럼프 당선 이후
대만 놓고 미·중 갈등

8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
박근혜 처벌하라

3면

생지옥 시리아와
러시아 제국주의

6면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 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각각 따로 만나겠다고 받아쳤다.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5·16 쿠데타는 "혁명"이고 사상의 자유도 "제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강행하려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에서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른 황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박근혜 탄핵 이전에도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구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2016년 6~9월에 열린 국무회의의 절반 가까이를 황교안이 주재했다. 그사이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열린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국정과제들을 나름대로 매우 힘주어 강조했다. 민영화 추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공공기관 기능조정·규제개혁,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구조조정 강화·노동개혁·성과연봉제, 사드 배치 강행,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공대 구조조정, 교육·금융 개혁 등.

박근혜의 임기 중반 구원투수로 임명된 총리답게 이 자는 특히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문제들 앞에서는 정치적 경호실장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른 총리들과 사뭇 달랐다. 심지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특유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아직도 자기가 공안 검사인 줄 아냐'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오만한 공안통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에서 황교안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황교안은 '호외자' 논란을 부추기는 치졸한 수법으로 검찰총장 채동욱을 쫓아내는가 하면 당시 수사를 주도한 윤석렬(현 특검 수사팀장)을 좌천시켰다. 성완종 리스트와 정윤희 국정개입 사건에서도 자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잇따른 이유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는 정부의 과실 책임을 은폐하려고 해경 123정장에 대한 기소를 방해했다. 당시 기소를 강행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다는 폭로도 나왔다. 세월호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데에도 단호히 반대했고 국무총리 취임 이튿날에는 '4·16연대'와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황교안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폭로되던 10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최순실이 누군지 모른다. 의원님이 알면 좀 알려 달라" 하며 비아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냥거렸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와 연관 없다. 그 시간 동안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 비서실장 김기춘도 모른다던 시간에 대해서 말이다.

이 자는 틈만 나면 자신의 검사 이력을 과시하며 법을 들먹였지만, 지배계급답게 실제로는 법도 제 입맛에 따라 이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긴다.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책임을 지켰을 때조차 황교안은 "그동안 우리가 해온 법이 있고 판례가 있고 ... 1심 판결인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야 한다" 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반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는 고작 버스 파손 등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2005년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 했을 때도, 황교안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엄벌',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 등을 이유로 구속해야 한다고 버텼다. 삼성 엑

스파일 사건에서도 이견희, 홍석현 등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다.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처벌협박은 황교안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대자들을 압박하는 데 즐겨 사용해 온 무기였다.

확신범

이런 태도의 극단을 보여 준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는 "민주노동당이 2000년 창당했을 때 언젠가는 위헌 정당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다"고 자랑했다. 저서인 <국가보안법>에서도 "어떤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조사·처벌할 수 있다는 식이니 그 자신이 수호하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도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자의 편을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7인에게 최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다. 황교안의 법무부는 몇 달 뒤 추가로 3인을 구속했고 201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게도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교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황교안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구속한 경력으로도 악명이 자자하다. 2002년에는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며 노동운동 탄압을 대폭 강화하려 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자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일삼았다.

황교안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때마다 이유와 부분, 심지어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몰아 탄압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과 자주적 행동을 극렬히 혐오하는 자다.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는 신앙생활에서조차 그는 보수 대령교회의 재산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시했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에서 그는 "교회를 노동법상의 사용자로, 교회 직원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결론이다" 하며 부패한 교회를 옹호했다.

박근혜의 적폐를 완수하려는 확신범이 이제 '권한'까지 대행하게 됐다. 이 자를 더는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장호중



황교안 총리 취임 이튿날 경찰은 '4.16연대'를 압수수색했다.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7호 2016년 12월 9,000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퇴진 운동
가부장제 이론 비판
불안정은 노동계급 전체가 겪는 문제다
마르크스 평가절하하기
트로츠키의 전환 강령: 그 활용과 오용

www.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 ★ 퇴진 운동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
- ★ 세월호 참사와 제주 해군기지의 커넥션
-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지 말라
- ★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 ★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살릴 수 있었다 12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3백4명을 상징하는 구명조끼 3백4개가 놓여 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때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 축소 외압을 넣은 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민심이 폭발할까 봐 전방위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축소하거나 틀어막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황교안은 이런 “박근혜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해 국무총리에 오른 것이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망언을 남긴 국방부 장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에 앞장선 해수부 장관,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 비난한 정무수석, 이 정부가 한통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했다. 최근까지도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 문구를 빼려고 역지를 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수많은 노력 끝에 적잖이 드러났다.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만이 아니라 침몰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선체 인양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화물칸을 중심으로 선체 훼손이 이뤄지는 것이 세월호에 실린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과 연관돼 있을 개연성을 집중 취재했다. 지난 6월 특조위는 세월호에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수백톤이 과적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과적된 철근 중 1백30여 톤이 선수갑판에 실려 있었는데 이는 배가 급격히 기우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은 박근혜 정부가 침몰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증거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광장의 요구다.

청해진해운 선원들이 철근 과적을 지적했지만 사측이 늘 이를 무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증언했다. 잘 알려진 대로 침몰 소식을 들었을 때 청해진해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물 기록 조작이었다. 이 조작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선원들은 배를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맞춰 보면 과적은 정부의 방조 혹은 압력 속에서 이뤄졌을 공산이 매우 크다. 검찰은 수사에서 화물 과적 부분을 파헤치지 않았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직후 한동안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철근 자재를 모두 부산항에서 조달한다고 조작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제주 해군기지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악천후에도 세월호가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국정원이 세월호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퇴진감

퇴진 운동에 나온 참가자들의 다수는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퇴진의 첫째 이유로 꼽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7시간 동안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냐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부터 말단 해경까지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구조된 선원이나 승객들에게 내부 상황을 묻지 않았습시다. ... 이것은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참사 원인부터 구조 실패, 진실 은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진작에 몰러났어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유가족들의 염원을 무시해 온 두 거대 야당에게 이런 과제를 내맡길 순 없다. 최근 민주당 의원 위성곤은 기존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수준의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현재 유가족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는 독립적으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중투쟁이 강력하게 건설돼야 한다.

김지윤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 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하다.

그런 다수 지배자의 의지를 대변한 듯한 선전물이 바로 전여옥의 《오만과 무능 — 굿바이, 촌의 나라》(도서출판 독서광, 2016)이다.

저자는 6·15선언을 폄훼하고, 노숙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8년 촛불 운동을 비난한 악명 높은 우익 언론인이자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다.

그는 박근혜가 아는 게 없는 무식쟁이인 데다, 끝에 극도로 오만 방자하고,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를 신고 늑대리들의 나이트클럽이나 출입할 듯한 늑고 천한 제비족 최태민과 함께 기업인들의 돈이나 뜯으러 다닌, 수준 이하의 인물이었음을 많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폭로한다.

박근혜는 말이든 글이든 형설수설하는 데다 가끔 열토당토않게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적 언사도 섞어 말한다고 한다.

또, 박근혜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박근혜를 ‘조종한’ 최태민 딸 최순실의 정체도 전여옥은 들춰 낸다.

물론 박근혜에게도 강점은 있는데, 바로 권력 의지, 권력에의 놀라운 집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는 그런, 크게 함량 미달인 인물이 어떻게 공식 정계 입문 후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대부분 승승장구했느냐이다.

전여옥은 한때,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에 당 대변인이었다가 2007년 박근혜에게 등 돌리고 이명박 지지로 옮겨갔다. 그러니 박근혜 공식 정치 인생의 전반부는 지지해 준 셈이다.

다른 우익들과 지배자들은 모두 박근혜와 그의 반동적인(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반평화 등) 정책들을 일관되게 지지했다.

그들이 박근혜의 결정적인 단점들을 몰랐을 리 없다. 허구한 날 작당이나 하고 앉았고 꿈수나 쓰는 인간들이 그결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들은 박근혜가 박정희 시대를 나타내는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할 수 있고, 정치 의식이 없는 후진적 유권자들로부터 동정표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는 박근혜라는 우상을 앞세워 그 우상 뒤에서 이윤과 권력을 쌓았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으셨네요!” 하자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그는 그 모든 자들과 공범이다. 부패

와 부정축재 공범이고, 노동계급 착취의 공범이고, 반민주 억압의 공범이고, 친미·친일 군국주의 후원의 공범이다. 이 경우에 공동정범의 주종관계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박근혜가 주범이다.

신분 세습 왕조라면 모를까 (자본주의적)민주주의 하에서는 형식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므로 일곱 살배기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 일은 없다.

박근혜처럼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성품이 결여된 인물이 국가 수반이 되고, 언론과 학계의 아첨꾼들이 그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온 국민에게서 쥐어짜 내려 애쓰는 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정치 체제(전여옥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인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 우익 포퓰리스트들과 심지어 나치의 부상도 같은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자들

이처럼 시스템에 비취 본다면, 그동안 박근혜라는 정치적 상징(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내세워 억압과 착취, 천대와 차별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 박근혜만 남겨 두고 도망가고 있는 명백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다.

그런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기성 정치인들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인 황교안 내각을 반대하는 것조차 막으려 애쓰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안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막으려 하고 있고, 비폭력적 정치 활동을 했는데도 단지 친북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된 진보당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다. 노동개악이 박근혜 하에서 쌓이고 쌓인 폐단(적폐)의 일부라는 점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노동자 연대〉 신문은 마르크스-레닌-트로츠키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므로 수감된 진보당 간부들의 사상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석기 등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아무의 목숨도 노리지 않았으며, 테러용 폭탄이나 총기를 준비하지도 않았다.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정당을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본가들을 비롯한 지배자들에게는 민주주의일지 몰라도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는 독재다.

지금 촛불 운동은 갈림길에 서 있다. 전진이나, 아니면 잠시 담보하다 퇴보까지 하느냐 하는 선택지 말이다. 정부·여당을 확실히 패퇴시켜야 한다. 적당히 패퇴시키고 빨리 선거 문제로 도망가는 것은, 명망과 존경, 점잖다는 칭찬의 입발림말을 늘어놓으며 정치적 소생의 기회를 엿보는 여권 세력에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박근혜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진친박 정우택은 '개헌을 추진하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상 정권 자체가 국민에게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새누리당 분당이 가속되고, 정권에 대한 원망과 증오도 커지겠지만, 지금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권력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체면이나 여론의 눈치를 볼 여력도 없다.

어떻게든 정치적 패퇴를 최소화해 재기를 도모하려면 그나마 남은 우파 지지층이라도 결집할 시간과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국이 흐르면, 만에 하나 박근혜의 명예 퇴진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라고 본질적으로 다를 건 없다. 비박계는 황교안의 박근혜 정책 유지 기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탄핵 소추위원 구실을 할 법제사법위원회장 새누리당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에 부정적인 인물을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으로 임명했다.

계급적

집권 여당이 이토록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 까닭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 적폐의 공범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온갖 반동적 정책들은 그저 측근 실세들의 사익 추구인 것이 아니다.

노동 개악, 복지 축소 등 고통전가 공격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계급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이었다.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미국 제국주의에 더욱 편승해 미국 중심 질서에서 한국 국가(즉 지배계급)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이를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에도 유리한 조건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 악행의 공범들로 가득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다.

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런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난제 속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비록 이런 꿈들이 미·중 갈등이나 경제 위기 회복 실패 등으로 모순과 위기를 겪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키워 왔지만 말이다.

드러난 사실들로 보건대, 세월호 참사는 침몰 원인부터 구조 실패까지 모두 '기업주 경제 살리기'와 '진제국주의 정책'이 결합되면서 낳은 비극이었다. 여기에 민중의 삶에 극도로 냉소적이고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박근혜의 개성이 덧붙여졌다.

이런 실제적 진실을 감추려고 청와대는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수사를 가로막고, 운동을 탄압해 온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정책 철회와 더불어 인적 청산(처벌)도 해야 한다. 박근혜의 해괴망측한 개성과 행태를 알면서도 지배계급이 이를 감싸고 포장

해 주며 대통령에 앉힌 이유를 이해하고 분쇄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벌과 언론도 표적에 놓아야 한다.

단지 거리에서 국회로 장을 옮겨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모종의 개혁 강령을 제시하는 문제로 적폐 청산 수단을 돌리면 이런 일들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실패한 사례는 청산 대상도 포함된 기존 국가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최소한의 청산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구속과 처벌에도 여러 해에 걸친 강력한 대중 투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야당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지닌 이런 계급적 성격 때문에 주류 야당들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 애초 거리 운동의 거대한 압박에 밀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그것이 민중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주류 야당들은 탄핵안 추진을 피할 수 없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야 움직였다. 이들은 이 과정을 자신들이 '민심'을 국회로 수렴시켰다는 식으로 포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주류 야당들은 역대 최대의 시위 이후에야 탄핵 절차를 밟았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도 야당들의 스텝이 꼬이는 이유다. 그럼에도 야당들은 국회 탄핵안 가결 뒤에 할 일을 다 했으며 정작 황교안 내각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적폐 공범 황교안과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이후 국정 운영에 관해 협상을 하자고 채근하고 있다.

개헌 논란도 기껏해야 대선주자들의 유불리 차원에서 제기될 뿐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개헌 논의는 박근혜의 명예 퇴진과 연결될 수 있어 위험하다.

박근혜의 악행과 적폐는 권력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위기와 계급의 문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 개악과 노동운동 억압을 자행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었는가?

한마디로 주류 야당들은 진정한 적폐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더더욱 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리 투쟁에 의존해야 한다. 황교안과 반동적인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야당을 비판하고 폭로해야 한다. 국회에게 한 것처럼 현재에도 투쟁의 압력을 넣어야 한다.

적폐 청산의 과정도 대중 투쟁의 성장과 유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적폐 청산의 내용물은 야당의 사회 개혁 과제가 아니라 대중이 그 청산을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요구들(행동강령)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작업장 투쟁과도 연결돼야 더 강력해질 것이다.

김문성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노동개악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민간 시중 은행들에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하고 12일 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8곳에서 일제히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결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했던 불법적 이사회 강행 통과를 재연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만 발이 묶였을 뿐 박근혜 정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도 작심한 듯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사활적으로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 성명에서 철도 파업이 "성과퇴출제를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고 노동개악의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허망한 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는 선부른 낙관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예컨대 당장 올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협상을 완료키로 한 현대차에서도 사측의 공격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총이 거듭 밝혀 왔듯이, 현대차에서 노동개악 관철은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민간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민간 사업장

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명령'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는데, 전환배치·해고 등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을 공격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처라며 말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망을 허물려는 시도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에 가속도를 내는 현 상황은, 이 와중에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양보를 얻기는커녕 임금·노동조건이 후퇴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조직 규모가 크고 단체협약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주요 노조들, 현대·기아차 등 금속노조의 주요 기동

들이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점을 보면 말이다.

실제로 기아차에선 최근 노동시간 단축(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노사합의가 체결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협상에만 기대다가 잔업 연장, 조기 출근, 신입사원 임금 차별 확대, 노동강도 강화 등의 후퇴를 수용하기도 했다. 기흥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4월에 유사한 협상안을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고 이번에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노조 지도부는 올해 내내 투쟁 건설을 회피했고, 이에 맞설 대안적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투쟁에 나선 곳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얼마 전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승리를 거뒀다. 통계청 무기계약직, 충북의 일부 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방과후 교사들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에 나서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부분 파업을 시작한 것도 좋은 사례일 것이다.

노동 현장의 좌파 활동가들은 현 정세 속에서 기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이를 이용해 자기 요구를 걸고 투쟁을 건설해 나가려고 애써야 한다.

박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주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치를 이유로 구속된 이들 중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 3년은 강간·강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경하게 한 위원장을 ‘단죄’한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에 장애물이 되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지난해 4월 24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하고, 11월 14일 민주총궐기를 주도했다. 이 집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해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참가자의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정부는 감호비상령을 발동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신종우 기자

급기야 고(故) 백남기 농민이 고압의 물대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요컨대,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반노동·반민주적 억압 정책의 상징이다. 그러니 민주주의 투쟁인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내걸고 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상균 석방을 퇴진행동의 공식 요구로 채택하길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퇴진 운동 참가자 ‘시민’의 압도 다수



장민아 기자

12월 3일 6차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한상균 구속은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구속이다.

는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이다. 노동개악은 바로 그들의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핵심 정책이다. 이를 대변할 노동운동과 좌파 측의 발언과 목소리가 더 많

아져야 한다.

더구나 조직 노동자 운동과 그 지도자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먼저 저항에 나서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위기를 심화시켜 왔다는 점을 봐야 한다. 지금의 퇴진 운동은 조직 노동자 운동에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박설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환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현재의 해산 결정 이를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진보당 탄압은 박근혜가 자행한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RO 회합’에서 “내란 음모” 등을 획책했다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활동가들을 구속했다.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RO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재판에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제출한 ‘RO 회합’ 녹취록은 국가정보원이 총 8백여 곳을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정권은 현재에 진보당 해산 심판도 청구했고, 현재는 청와대와 교감 속에 신속하게 해산 결정을 내렸다. 소속 국회의원 6명에, 수십만 명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고작 헌법재판관 9명의 현재가 해산시켜 버린 것이다.

RO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현재는 문제가 된 ‘RO 회합’을 “내란 관련 회합”

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사 그 회합에서 나온 얘기가 모두 사실이고 거기서 일부 과격한 주장이 있었을지라도, 그 회합은 본질적으로 토론이었다. 내란이라 할 만한 계획의 구체성이 없는 데다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아 계획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주제가 무엇이든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고 표현할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실사 당시 진보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진보당 자체는 의회민주주의의 규칙을 따라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해 왔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운동 일부의 친북 사상을 마녀사냥하고 처벌해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저항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려 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작이 됐다. 진보당이 탄압받았지만, 조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는 민중의 저항으로 제임기를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금은 박근혜를 포함한 온갖 적폐들을 청산할 좋은 기회다. 적폐 청산 요구에 이석기 전 의원 등 진보당 마녀사냥 구속자들의 석방이 포함돼야 한다. 더 나아가 친북 좌파든 혁명적 좌파든 누구나 자신의 정견을 주장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정치적 자유까지 쟁취해야 한다.

진보당 마녀사냥을 진두지휘했던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의 내각을 용인해선,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켜 온 적폐를 청산하기 힘들 것이다.

김영익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친제국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도 황교안 내각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손소희 조직팀장에게 사드 배치에 맞선 현지 투쟁 얘기를 들었다.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퇴진 요구는 박근혜가 해 온 일을 모두 멈추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생략한 채 [사드 기지] 공사를 조기에 강행하려 합니다. 박근혜식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아무런 정당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미국의 압력으로 진행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 안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정작 이 땅 주민의 의중은 미국의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드 배치 발표 직후 황교안이 성주를 방문했을 때 많은 성주 군민들이 분노했다고 기억합니다. 그 뒤 황교안은 ‘외부세력’, ‘사드 과당’ 운운하면서 성주 군민의 분노를 왜곡했습니다.

7월 15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통고하고서 황교안 총리가 성주로 왔죠. 자신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명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주 사람들은 너무 분노했어



신종우 기자

지난 여름부터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

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당장 우리 집이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말입니다. 총리가 내려와 허리를 굽히면서도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고 하니 화를 돋운 셈이죠. 그래서 군민들이 6시간 동안 [총리의] 차를 막아 세웠던 것이고요.

결국 황교안 총리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주했죠. 심지어 총리가 탄 차는 아이 세 명이 타고 있던 차를 받아놓고도 뺑소니를 치면서 황급하게 도망갔어요.

탄핵 가결 이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온갖 나쁜 정책들을 청산하지는 못 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도 청산해야 할 나쁜 정책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12월 17일] 8차 촛불에 소성리 어

머님께서 [광화문] 본무대 발언을 하십니다. 사드 배치 철회가 광화문 촛불에서 외쳐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사드 문제를 과제로 제출한다면 이 싸움은 성주와 김천의 싸움만이 아니게 되죠. 전국의 투쟁, 무엇보다 서울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철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등] 야당 입장이 불분명해요. [사드] 폐기 입장이 아니죠.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식으로 사드 배치의 여지를 남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정리 김여진

※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시리아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의 군대는 최근 알레포 전역을 장악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지난 4년간 반정부 세력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정부군은 '테러리스트한테서 도시를 해방시켰다'고 떠들지만] 이것은 전혀 해방이 아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피난을 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시리아 정부군과 그들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알레포 진격에 앞서 몇 달에 걸쳐 폭격을 퍼부었다.

러시아 국영 방송의 진행자는 러시아 병력이 알레포 탈환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음을 자랑했다.

미국과 서방은 이번 공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위선자다. 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러시아 제국주의가 개입하기 한참 전부터 중동의 상황은 끔찍했다.

미국과 서방은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1981~2011년 집권), 튀니지의 제인 알 아비딘 벤 알리(1987~2011) 같은 독재자를 오랫동안 후원했다.

미국 전 대통령 조지 부시와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는 [2003년] 이라크와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그 나라들을 망가뜨렸다.

조지 부시

지금도 서방은 예멘에서 민간인을 폭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권에 무기를 팔고 있다. 그런 자들이 아사드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시리아는 지배계급이 권력욕에 눈이 멀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2011년, 혁명이 시리아를 휩쓸었다. 이는 진정한 민중 반란이었고 당시 아랍 세계를 뒤흔들던 혁명적 물결의 일부였다.

그러나 혁명은 고립됐고 패배했다. 대중의 혁명적 에너지는 사라졌다.

한편, 많은 시리아인들이 살해되거나 생활 터전을 떠나야 했



2011년 시리아 혁명의 주역인 민중의 머리 위로 포탄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 Christian Treibert

다.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인들을 “동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을 막으려고 장벽을 쌓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든 외세가 폭격을 늘리거나 시리아에 더 많

이 개입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못 된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공중 지원”은 서방 전투기들이 관장하는 것이고 결국 한층 더 격화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시리아는 지배계급의 반동과 제국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34호 / 번역 김중환



◀ 12월 16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학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사진 조승진

서울대 음대 강사 복직 투쟁이 승리하다

1년 전 무더기 해고됐던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들이 전원 복직됐다. 지난 30년 동안 성악과 시간강사 임기는 사실상 5년이였다. 2014년 채용공고문에는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5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강사들은 성악과 ‘내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갱신기대권’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박근혜가 임명한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음대 강사들을 집단 해고했다. 서울대 음대 안에서 ‘윤순실’이라 불리는 한 음대 교수는 노동자들이 해고된 뒤에 자기 제자들 9명을 고용해서 노동자들의 울분을 샀다.

이에 항의해 강사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음대 강사들은 생애 처음으로 학교 당국과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올해 1월 12일 서울대 학내 단체들이 모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집단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도 결성했다.

성낙인 총장은 강사들의 철회 요구를 1년 동안 철저히 무시했다. 천막



“시국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습니다.”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로 일관해 왔다.

시흥캠퍼스 건립을 일방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을 사찰하고, 청탁을 받고, 보직인사를 하는 등 전횡도 일삼아 왔다. ‘비학생 조교’ 문제(기간제비 위 반), 셔틀버스 노동자들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 등도 쟁점이 돼 왔다. 이미 서울대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국립대

2위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음대의 해고 노동자들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투쟁을 계속했다. 지난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을 때 기각됐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시흥캠퍼스

11월, 음대 강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결국 중재안을 냈다. 이

후 ‘시간강사법이 적용되면 2년, 적용되지 않으면 3년 고용보장을 받는다’는 중노위 중재안을 학교 측이 받아들였다. 물론 완전한 승리는 아닐 지라도 1년 동안 끔찍했던 학교 측이 양보한 것이다.

강사들이 승리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낙인도 총장 임명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투쟁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 온 전유진 강사는 “시국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고 전한다. “지노위와 중노위 때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지노위 때에는 음대 학장이 혼자서 20분 동안 떠들었어요. 중노위 의원들이 음대 학장이 혼자서 떠들지 못하도록 제재하기도 했죠. 중노위 때에는 분위기가 호의적이었어요.” 음대 강사들의 굳건한 투쟁이 유리한 정세 속에서 성과를 낸 것이다.

둘째, 서울대 안팎의 굳건한 연대도 승리의 비결 중의 하나였다. 전유진 강사는 연대가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

다고 말한다. “총장실을 70일째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대가 정말 중요했어요. 3명으로 시작한 저희 천막 농성은 교내의 연대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총학생회가 먼저 연락해서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대학노조, 시설관리과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지지해 주셨어요.” 전유진 강사는 각별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도움을 강조했다. “일이 터지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도움을 받았어요. 한교조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박근혜뿐 아니라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량해고법인 시간강사법 시행령처럼 대학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후퇴시킨 일련의 정책들 또한 박근혜 적폐 중 하나다.

서울대 음대 강사들의 투쟁은 박근혜 퇴진 운동 한복판에서 맞이한 소중한 승리다. 정권의 치부가 하루하루 새롭게 폭로되고 있는 지금, 서울대 음대 강사들의 승리는 정세의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소중한 사례다.

김여진



서평 |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기자 + 쓰레기

지난 몇 달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내가 <내부자들> 같은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한겨레>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 CCTV 보도 등 하루가 멀다하고 충격적인 특종 보도들이 연쇄 폭탄처럼 터졌기 때문이다. 저녁 8시가 되면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월드컵처럼 뉴스를 보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

신간 《박근혜 무너지다》는 <미디어오늘>의 정철은 기자가 청와대에 맞선 기자들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특히 저자는 ‘박근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수 언론이 이탈하고 분열한 장면들을 흥미진진하게 보여 준다. 최순실 게이트 보도의 최초 실마리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민정수석 우병우와 검사 진경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제공했다. 저자는 이러한 보수 언론의 이탈 뒤에는 보수 언론조차 허를 내두를 정도로 지독한 박근혜의 ‘불통’ 스타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자도 지적하듯 <조선일보>는 “권력 무너지는 냄새를 맡”기 전까진 줄곧 “박근혜 정권의 내부자”였다. 상황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최근 박근혜 정권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같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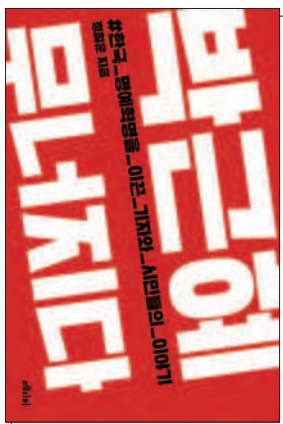
왜 ‘내부자’는 돌변했나

박근혜는 집권 여당의 4월 총선 참패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 회복은커녕 집권 여당의 분열은 깊어졌다. 총선 직후 박근혜는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부각하며 지지를 회복을 노렸지만 구조조정의 속도와 방법,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 이해 다툼은 거세졌다. 구조조정 대상인 대우조선해양과 구조조정 컨트를 타워였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 사이의 갈등이 한 예였다.

비슷한 시기 <TV조선>은 친박이 공천에 개입한 사실과, 벅슨이 민정수석



정권의 위기와 보수 분열을 보며 대중은 자신감을 얻었다.



박근혜 무너지다
정철은 지음, 미디어오늘, 300쪽,
15,000원

우병우 처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검사장 진경준이 다리를 났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조선일보>는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과 인사 참사, 유승민 찍어내기, 메르스 사태 등 “상식을 벗어난 일”이 거듭되면 공분을 일으킨다”며, 레임덕에 처한 보수 정권의 안정을 위해 박근혜가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청와대는 우병우 건을 취재한 기자를 고소하고 그 기자에게 정

보를 흘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개 비판하며 특별감찰관실을 공중분해시켰다. <조선일보>가 이에 항의하며 나서자 박근혜는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의 비리를 맞 폭로해 <조선일보>의 무릎을 꿇렸다. 저자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전한다. 지배계급의 일부이자 권력의 일부인 <조선일보>로서는, 자신들이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 억울하고 분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최순실 관련 보도를 멈췄다. 그러나 이 열린 틈을 비집고 9월 20일부터 <한겨레>와 <JTBC>가 등장했다. 특히 <JTBC>는 최순실 태블릿을 폭로하면서 박근혜가 시정연설에서 꺼내 든 개헌 카드를 물어 버렸다. 친박은 송민순 회고록을 꺼내 들었지만,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실이 폭로되고 곧이어 터진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퇴로 묻혀 버렸다. 상황은 점점 견잡을 수 없는 정권의 위기로 치달았다.

박근혜는 한때 자신을 “형광등 1백

개 켜 놓은 아우라가 있다”며 떠받들던 보수 언론과 치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진실의 틈’이 열렸다. 이는 경제 위기 탈출과 노동자 투쟁 제어라는 사명을 띠고 출범한 보수 정권이 그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위기에 빠지자 지배자들이 서로 싸우며 분열한 한 상황의 단면이다.

언론이 싸울 수 있는 동력

한편 저자는 언론이 청와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독자들과 평범한 대중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관점은 좋다.

그런데 저자는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전부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 온 운동과 그 운동을 건설해 온 세력들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신 저자는 보수 언론의 분열과 정권의 위기를 SNS 해시태그 운동(#그런데_최순실은)이 키웠다고 본다. 시민들은 “조직과 깃발이 없어도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한 뉴스피드와 좋아요”로 연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에서 벌어진 다양한 참여는 퇴진 운동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의 한 반영이다.

퇴진 운동이 폭발한 출발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민주총궐기 투쟁 본부가 개최한 10월 29일 집회였고, 민주총궐기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노동개악 반대 투쟁, 세월호 운동,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이었다.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도 수많은 깃발이 나부꼈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SNS 혁명’이라고 불렀다. 시위 과정에 ‘우리 모두 칼레드 사이드(경찰 폭력에 죽은 한 이집트인)’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적극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페이지를 만든 와엘 고넴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이집트 혁명을 페이스북 혁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혁명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을 때도 혁명은 있었습니다.”

이집트 활동가 기기 이브라힘은 페이스북과 이메일은 예전부터 사용됐지만, 1월 15일 이후 비할 바 없이 큰 규모의 동원이 가능했던 것은 활동가들이 국가 탄압을 피해 리플릿을 반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과 결합됐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SNS의 구실에 대한 과장된 관점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정권 내부자에서 정권 심판자로 돌변한” <조선일보>의 이중성을 속시원하게 비판하고, 퇴진 운동에서 평범한 대중이 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기 아쉬울 만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 치명적 치부를 드러내며 무너져 간 박근혜와, 무너지는 권력의 틈을 비집고 신나게 취재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기자들, 언론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경쟁과 협력의 에피소드들이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김승주



영화평 | <판도라>(2016, 박정우 감독)

문화 통제광 박근혜가 억압한 영화

영화 <판도라>는 핵발전소 사고를 다룬 영화다. 이 영화는 현재 예매율 1위이며, 관람객 2백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주인공들은 노후한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다. 핵 발전 회사는 몇 년을 걸쳐 시설점검을 해야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2달 만에 점검을 끝내버린다. 그러던 중 지진이 난다. 아니나 다를까 냉각기통 밸브에 균열이 생긴다. 곧 핵발전소 냉각수 공급이 끊긴다. 그냥 두었다간 원자로 온도가 급상승, 폭발하여 방사능이 누출될 것이 명백해진다. 이미 핵발전 회사와 정부에는 이 사실이 보고된 상황이지만, 핵발전 회사와 국가 관료들은 이를 은폐한다.

핵발전 회사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진으로 인한 균열부위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폭발이 임박했음에도 명백해지자, 회사는 차폐기를 내려 노동자들의 탈출을 막는다. 노동자들의 사투가 시작된다.

한편 동네 주민들은 방사능 대피소에 모인다. 그러나 핵발전소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은 대피소에 동네 사람들을 전부 가둔다. 그리고는 새벽을 틈타 사람들을 가둔 채로 자신들만 빠져나가버린다. 정부 관료들과 핵발전 회사는 거짓말 하거나 뒷집 지고 있고, 나름 ‘정의로운’ 대통령은 ‘멘붕’에 빠진다.

그러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 소방 구조대원 등 평범한 사람들이다. “잘못은 자들이 다 저질러놓고 왜 책임은 국민들보고 지라고 하는 것이냐. 개새끼들!” 하고 주인공 재혁은 포효한다.

이 영화는 이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정한 체제인지 잘 보여 준다. 탈핵을 지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오재하

기사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영화 <판도라> (판도라) 촬영: 박정우 감독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김영익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문제, 북핵 등 현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은 타이완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라고 여긴다. 한쪽 민족주의자들에게 타이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인 데다가,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게 되면 자칫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 호락호락 물러설 수가 없다.

실제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즈음에 바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해 남중국해 일대를 돌게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일 기종의 폭격기가 타이완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이에 중국 관영 <한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타이완과 관련한 정책을 재설정해야 하며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군사 투쟁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공산이 커졌다.

타이완 문제에서 트럼프가 보인 급작스런 행동은, 그의 별난 성격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의 제해권에 도전해 왔다. 남중국해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미국 오바마 정부는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 왔다.

동아시아 바다를 누가 통제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증하면서, 타이완 문제 같은 잠재적 화약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져 왔다. 트럼프의 ‘돌출’ 행동은 바로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레이건

대선 기간에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트럼프는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는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외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처를 철폐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의 주된 타격 대상은 중국이다. 트럼프는 해군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에서 우위를 지킬 것임을 공언했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서태평양 일대에서 군사력으로 중국을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인선 방향도 새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더 공세적으로 나갈 것임을 짐작케 한다. 트럼프는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의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오랜 친구다.

틸러슨 지명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트럼프의 의중을 보여 준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국어와 러시아가 밀착하도록 놔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다.”

1970~80년대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그 반대를 시도해 보려는 듯하다. (물론 이는 미국 지배자 다수가 동의한 게 아니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노동자 연대)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을 두고 ‘환을 조작국,’ ‘지적재산권 절도국,’ ‘각종 무역 보조금으로 무역 질서를 혼드는 국가’로 낙인 찍었다. 앞으로 그 공세의 수준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전보다 더욱더 커질 듯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사설에서 이 점을 우려했다. “중국 지도부가 흔들리는 자국 경제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미국에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투적인 대통령이 선출된 이때, 이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위험성이 더 높았던 적도 드물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적 경쟁이 결합되는 양상이 더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더한층 점증할 것이고, 그 여파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하고, 이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 필요가 더 커졌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사회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차별과 천대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일간 신문에 없는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전하는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주례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